

역사용어에도 유효기한이 있다 - 신라 삼국통일의 균열

저자 (Authors)	권순홍
출처 (Source)	내일을 여는 역사 75, 2019.6, 22-36(15 pages)
발행처 (Publisher)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3255
APA Style	권순홍 (2019). 역사용어에도 유효기한이 있다 - 신라 삼국통일의 균열. 내일을 여는 역사, 75, 22-3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19/11/24 13: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역사용어에도 유효기한이 있다

- 신라 '삼국통일'의 균열

권순홍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후연수 연구원

같은 전쟁, 다른 이름

김춘수의 시처럼, '하나의 몸짓'이 '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 부르기가 필요하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그의 노래는 역사학계의 오랜 수사였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 가운데 몇 개만을 골라 별자리를 그려내듯, 과거의 낱말들 중 의미 있는 사건들을 가려내어 역사로 이름 붙이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팩트'로서의 과거와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분명히 구분하자. 단,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자. 사회가 처한 조건에 따라 시대적 요구는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전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까닭이다.

이승만 정권 이래, '북의 남침'을 강조하는 '6·25 사변'이라는 용어는 전쟁의 책임을 북에 지우면서 북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키워왔던 반면, 6월 25일 이전부터 38선 부근에서 일어났던 국지전과 지리산 등 지에서의 빨치산 활동을 잊기 쉬웠다. 이런 지적과 더불어 이 전쟁의

국제전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 1980년대부터 '한국전쟁'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2000년대 이후에는 통일 이후를 전망하면서 민족 내부의 전쟁, 즉 내전적 성격이 전쟁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6·25 남북전쟁'이라는 용어가 새삼 제안되기도 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전쟁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름 부르기도 달라졌던 셈이다. 자료의 발굴과 연구의 축적에 따라 전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결과이기도 했지만, 이념 대립과 냉전의 시대를 지나, 평화를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가 역사용어에 반영된 결과였다.

어디 이 뿐인가. 여전히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전쟁도 마찬가지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단죄와 책임 전가, 조선의 이 같은 도덕적 판단만이 드러나는 '왜란'은 도리어 일반 민중의 의병활동 등 조선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회사적인 흐름들을 은폐하고, 국제전으로서의 동아시아사적 연동성을 배제한다는 지적과 함께, '임진전쟁', '동아시아7년전쟁', '동아시아삼국전쟁' 등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임진왜란'은 비록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지만, 이 시대까지 유효한 이름일 순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반면, 일본에서는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이 전쟁을 '조선정벌'로 부르면서 '성전(聖戰)' 혹은 '정의의 전쟁'으로 평가해왔다. 20세기 초, 그 열망은 드디어 제국주의로 표출되어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에 이르렀고, 이 와중에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들을 황국신민으로 교육하기 위한 '학문의 국책기여'를 발동했다. 새로운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요구되었고, 이미 식민지가 된 조선은 더 이상 정벌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내선일체의 논리 속에서 이 전쟁은 내전적 색채를 띠는 '문록경장의 역(文祿慶長の役)'으로 개명될 수 있었다. 이윽고 1945년 이후, 일본 제국주의

에 복무했던 전전 역사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 전쟁을 ‘조선침략’으로 고쳐 부르자는 제안 역시 전후 일본이라는 새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의미 부여였던 셈이다.

이제 7세기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보자. 흔히 ‘삼국통일전쟁’으로 불리는 바로 그 전쟁 말이다. 위에서 확인한대로, 전쟁의 이름은 당사자 혹은 그 후손들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달리 불릴 수밖에 없었다. ‘삼국통일’이라는 지극히 신라 중심적, 승자 위주의 ‘이름 붙이기’는 정통론적 인식체계에서는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삼국통일전쟁’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혹은 정통론적 인식에서 출발했던 ‘삼국통일’의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의미할까. 단,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름 붙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이 전쟁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이름으로 불려 왔느냐의 문제이다. 곧 ‘이름’의 변천에 관한 이야기이다. 염두에 둘 것은 전쟁의 이름이 실제 전쟁의 성격이나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름’의 변천

“삼한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이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니(三韓爲一家 百姓無二心) 비록 태평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또한 소강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이 문병 차 방문한 문무왕에게 했다는 이 말은 7세기 전쟁의 결과를 처음으로 ‘삼한일통’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이 기록을 신문왕대의 산물로 볼 것인

지, 신라 하대의 조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현재 학계에 이견이 있지만, 신라 당대부터 이 전쟁에 '삼한일통'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신라가 이 이름을 통해 획득한 의미는 왕조의 정통성 혹은 체제의 정당성이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삼국통일전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훗날 그렇게 평가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중요했다. 이로써 10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부활을 자처한 견훤과 궁예의 등장, 즉 후삼국의 분립을 계기로 그들을 제압하고 개국한 고려는 '삼한일통'의 명분을 계승할 수 있었다. 이 와중에 앞선 신라의 '삼한일통'이라는 과업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후 12세기의 『삼국사기』(김부식), 15세기의 『동국통감』(서거정 등), 18세기의 『동사강목』(안정복)에서도 여전히 삼국-신라-고려-조선이라는 왕조정통론이 작동하면서 7세기 전쟁의 결과는 '삼한일통'으로 평가받았다. 이 와중에 발해는 저 정통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19세기의 『해동역사』(한치윤·한진서), 『대동지지』(김정호)는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내렸다. 신라와 발해를 포함하는 남북국론이 제기됨으로써, 7세기 전쟁의 결과가 더 이상 '삼한일통'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청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동아시아 정세의 격변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북방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중화와 화이를 철저히 구별하던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 적응해 온 동아시아의 각국은 이제 이적으로 멸시해 온 여진족의 왕조인 청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나타난 화이론의 변용이라는 흐름 속에서 조선의 고유문화 혹은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마련되었고, 자국사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즉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국사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가는 뚜렷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조건

이 바뀔에 따라 의미 부여도 달라졌다. ‘삼한일통’을 명분으로 한 신라 정통론이 아니라, 발해를 병렬시킨 남북국정통론이었다. 이때 ‘일통’의 과업은 신라가 아니라, 남북국을 통일한 고려에게 돌아갔다. 7세기 전쟁에서 ‘삼한일통’의 이름이 지워진 셈이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은 다시 등장한다. 19세기말 시작된 근대 역사학은 왕조 위주의 정통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인과론적 실증을 요구했지만, 한국의 근대화가 파행을 거듭했던 것처럼 한국사에 대한 근대적 역사서술도 일본인들에게 선점 당함에 따라 굴절이 불가피했다.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 학계의 관심은 만주로 향했다. 그들은 ‘학문의 국책 기여’를 주창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와 조선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활동은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지리에 대한 고증이었지만, 그 목적은 단연코 일제의 안정된 한반도 지배를 위해서는 만주 경영이 중요함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30년대 일제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고, 1937년 일제가 만주국을 세움으로써 논의는 확대됐다. 조선의 역사가 만주에 종속돼 있었다는, 반도적 성격론에 이어서 만주사를 중국사에서 분리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만선사관의 등장이었다. 일제는 만주국과 조선에 대한 효율적 식민 통치를 위해 역사적으로 만주는 중국과 분리된 지역이었고, 특히 조선은 만주에 종속적이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만선불가분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절실했던 만큼, 한국과 만주의 내부 경계에 관한 역사적 변천의 검토도 중요했다. 만주사와 조선사 각각의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 만선사관은 신라의 ‘반도통일’을 부각시키면서 발해를 한국사에서 떼어내어 만주사로 편입시켰다. 신라 ‘삼국통일’의 재등장이었다. 정통론적 인식에서 나타났던 ‘삼국통일’이 제국주의 침략정책

에 따라 전유된 것이다.

한편, 이 시기 한국 역사학계의 숙제는 저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었다. 이미 1900년대 초, 신채호 등의 지식인들은 비록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나라는 빼앗길지라도, 존재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적 형태로서 민족을 발견했고, 해방 직후 손진태 등에 의해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수립된 계기로서 평가받았다. '이름'은 같았지만, 식민주의 역사학에서는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국사와 만주사의 구분을 위해 '삼국통일'을 강조했던 반면,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방법으로서 민족 역사의 복원을 위해 '삼국통일'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삼국통일'의 재전유였다. 단, 해방 이후 발해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통일신라'와 발해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신라 '삼국통일'의 의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발해를 한국사로 인식하려는 시도였다. 각종 개설서와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표제는 그 결과였다.

머지않아 '통일신라와 발해'의 어색한 공존과 '제한적 통일'은 비판에 직면했다. 1980년대, '통일신라'와 발해의 병존은 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발해를 포함하는 한국사 체계를 위해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세기 전쟁은 신라 중심의 '삼국통일전쟁'일 수 없었고, 동아시아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동시에, 근대 역사학 이래 이어져 온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과업은 후대의 평가일 뿐, 실제로는 '백제통합'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기도 했다. 한국의 근대 역사학이 당면해 온 민족문제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민족 형성 시점을 주목한 '삼국통일'의 역사성은 인정하더라도, 발해를 포함하는 남북국론과 한국사 체계의 완결성에 방점

을 둔 해석이었다. 이후 중국의 동북공정은 하나의 계기였다. 2000년 대 이후,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중국의 국가전략은 고구려 및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한국학계는 고구려와 발해를 포함하는 한국사 체계의 확립으로 대응했다. 삼국통일론보다 남북국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조건이었다. 7세기 전쟁의 결과를 민족 형성의 계기로서 ‘삼국통일’로 읽을 것이냐, 한국사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남북국으로의 귀결로 읽을 것이냐의 대립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두 가지 논점

그 동안 이 전쟁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이름으로 불러 왔느냐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를 고민할 차례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의는 현재 크게 두 가지 논점으로 귀착되었다. 첫째, 신라의 삼국통일인가, 신라의 백제통합인가. 다시 말해, 7세기 전쟁의 결과가 실제로 ‘삼국통일’로 부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관건은 전쟁 이후 신라가 차지한 영토인데, 당과 신라의 협상 내용에 등장하는 ‘평양이남 백제토지(平壤已南 百濟土地)’와 전쟁 이후 신라가 주군으로 삼았다는 ‘고구려남경(高句麗南境)’에 대한 해석 차이이다. 전자는 전쟁 결과 신라가 기왕의 고구려 영토까지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삼국통일’을 이루었다고 해석한 반면, 후자는 두 사료 모두 고구려 영토를 포함할 수 없다고 이해함으로써 신라의 백제통합에 그쳤다고 해석했다. 이때 후자는 이 전쟁의 결과를 남북국의 성립으로 이해하려는

남북국론의 입장이다.

둘째, 삼한일통 의식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인가. 앞서 확인한대로, '삼한일통'은 7세기 전쟁에 대한 신라 당대의 평가였는데, 7세기에 이미 있었다는 견해와 9세기에야 나타났다는 견해가 대립 중이다. 관건은 이 전쟁을 '삼한일통'으로 평가했던 사료 및 금석문, 곧 『김유신행록』과 청주운천동사적비의 연대관이다. 전자는 두 자료의 연대를 7세기로 파악함으로써 신라 중대왕실이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한일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본 반면, 후자는 두 자료의 연대를 9세기로 판단함으로써 신라 하대 김헌창의 난 등 사회의 분열과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삼한일통'이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이때 후자는 다시, 우리 역사에서의 '통일'이 7세기 전쟁이 아니라 10세기 후삼국 통일 전쟁의 결실로 이해함으로써, 민족사의 관점에서 신라가 아닌 고려를 획기로서 평가했다. 전자가 '통일'로 표현되는 민족 형성보다는 발해가 포함되는 한국사 체계를 우선시했다면, 후자는 민족 형성의 시점을 신라가 아닌 고려로 평가했던 셈이다. 단, 후자가 말하는 삼한일통 의식에서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발해가 다시 배제됨으로써, 한국사 체계의 완결성에 균열이 생겼다.

민족과 한국사를 넘어

7세기 전쟁은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오늘 날까지 각 시대, 각 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다. 신라 이래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조정통론에서는 '삼국통일'로 불렀고, 청의 등장 이후 북방지역에 대한 영토의식이 나타난 19세기부터는 발해를 포함하기 위해 7세기 전

쟁의 결과를 ‘삼국통일’로 부를 수 없었다. 이후 근대 역사학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발해를 배제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로 다시 이름 붙였고, 이에 저항했던 한국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삼국통일’을 민족 형성 시점으로 강조하면서도 발해를 한국사로 편입시켰다. 이 와중에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역설이 드러났고, 민족 형성 시점을 강조하는 ‘신라 삼국통일론’과 한국사 체계의 완결성을 강조하는 ‘남북국론’이 대립하고 있다. 양자의 대립은 공히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공히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공고했던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이름에 약간의 균열이 갔다는 사실이다. 근대 역사학에서 재등장했던 신라 ‘삼국통일’의 유효성은 다시 의심받고 있다. 한편, 발해사는 한국사라는 당위를 전제로 하는 남북국론 역시 재음미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지금 우리에게서 근대의 민족,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창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삼국통일론’과 ‘남북국론’은 민족을 단위로 하는 한국사 체계라는 민족주의적 인식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민족 혹은 국민국가 단위가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발해사를 반드시 한국사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더불어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을 소급하여 유사 이래의 민족사를 복원해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민족 단위의 한국사 체계 속에서는 몇 가지 놓치는 것들이 있었다.

첫째, 민족 단위의 역사서술은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중심과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닌 주변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심과 주변, 지배와 종속의 이야기에서는 부여와 옥저, 읍루와 말갈, 동예 등 이른바 주변부이자 종속의 역사들은 쉽게 배제되었다. 둘째,

한국사 체계에 집착하면 동아시아사적 연동성을 간과하기 쉽다. 예컨대, 7세기 전쟁의 결과로서 '삼국통일' 혹은 '남북국의 타당성 검토에 만 몰두한 나머지, 7세기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 변화는 주목하지 않았다. 민족과 한국사 체계의 한계였다. 중심과 주변, 지배와 종속의 패러다임을 넘어, 그리고 민족과 한국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동아시아사 서술이 요구된다면, 7세기 전쟁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역사는 해석이니까. 민족과 한국사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새롭게 7세기를 재현하려는 이유이다.

동아시아 7세기를 새롭게 재현하기

7세기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시기였다. 중국 대륙에서는 당이라는 제국이 등장했고, 한반도 일대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발해가 건국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다이카 개신과 임신의 난이 있었다. 마치 20세기 초, 한·중·일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이 각각의 사건들은 연동하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노정되었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정과 조건은 서로 달랐지만, 그 변화는 언제나 고구려와 수·당의 적대관계를 중심축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전쟁'을 냉전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이 전쟁을 승자인 신라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수·당과 고구려의 적대관계가 중심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자. 그리고 전쟁의 결과도 삼국통일 혹은 남북국의 관점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변화를 시야에 두어보자.

위진남북조의 분열기를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한 수는 대내적으로 정통성의 확립과 대외적으로 수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려고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수를 이어 618년에 건국한 당의 동아시아 전략도 기본적으로 수와 마찬가지로였다. 당 태종은 수의 멸망으로 흩어진 국내의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막북의 동돌궐(630년), 서역의 토욕혼(635년)과 고창(640년)을 차례로 복속시켰다. 이제 당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을 위해 남은 것은 동쪽의 눈엣가시, 고구려뿐이었다.

한편, 고구려는 당이 건국한 초기에는 영양왕 때의 대수강정책과는 달리 온건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642년 10월(혹은 9월) 평양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연개소문의 등장이었다. 그는 영류왕을 시해하고 귀족 180여 인을 죽임과 동시에 왕의 어린 조카를 왕으로 옹립한 뒤,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국정을 장악했다. 연개소문은 이 과정에서 대당온건세력을 제거한 까닭에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당강경노선이 불가피했다.

고구려 공격의 명분이 축적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당 태종은 시해당한 영류왕을 위해 조제(弔祭)까지 행하면서 입장을 정리했다. 마침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신라가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당 태종의 고구려 공격 의지는 촉발되었다. 당 태종은 645년, 마침내 고구려에 대한 친정을 선언했다. “짐이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뜻은 중국 자제의 원수를 갚고 고구려 군부의 수치를 씻으려는 데 있을 따름이다. 또 중국의 사방이 크게 평정되었으나, 오직 이곳 고구려만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짐이 아직 젊을 때 사대부의 힘을 빌어 고구려를 취하려는 것이다”는 당 태종의 발언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미 중국의 사방이 평정되었음에도 고구려만이 아직 복속되지 않았으므로, 고구려 공격은 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당시

양국의 관계에서 신라가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

645년, 당 태종은 고구려 공격을 위해 대략 20만 명 이상의 수륙군을 편성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고구려는 15만의 군대를 동원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전쟁에 동원되는 양국 군사의 규모이다. 수십만 대군의 징발은 기왕의 직업 군인제만으로는 불가능했다. 병호제의 폐지와 부병제의 수립은 당의 상비군을 대부분 농민으로 탈바꿈시켰다. 고구려도 다르지 않았다. 양국 모두 이전과 달리, 다수의 농민을 동원하여 대규모 군대로 정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제 개편은 사회의 각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대규모 군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부세의 안정적 수취는 필수적이었다.

다시 말해 안정적 수취를 담당할 관료시스템의 정비도 가늠할 수 있다. 당과 고구려의 대규모 군대 동원은 율령에 기초한 관료시스템과 국가 체제에 기초했던 셈이다. 여기서 조금 더 추정하면, 당과 고구려의 이러한 중앙집권성의 강화는 그들을 상대했던 주변국, 즉 백제, 신라, 일본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각 사회의 중앙집권성도 강화시켰으리라. 이로써 7세기 동아시아의 각국이 참가한 국제전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 와중에 앞서 언급한 642년 고구려 연개소문의 집권과 같은 해 백제 의자왕의 친위정변, 647년 신라 김춘추의 집권 그리고 640년대 후반 일본의 다이카 개신 등의 연쇄 반응은 각국의 독립된 사건이 아닌 동아시아사적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한편, 안시성에서의 패배로 단기 점령전략으로서의 고구려 공격이 실패하자, 이후 당은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마침 659년, 백제의 빈번한 공격으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나당연합의 제휴에 입각하여 백제 공격을 요청했다. 당의 단

독작전에 의한 요동 공략의 한계가 노출된 상황에서 당으로서도 새로운 전략의 구사가 필요했다. 백제를 후방의 거점으로 확보한 후, 평양으로 직공하는 평양직공책이었다. 660년, 소정방과 유백영이 지휘하는 백제 공격군이 신라군과 연합하여 사비성을 함락시킴으로써 백제는 멸망했다.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백제의 외교는 철저히 실패한 셈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당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662년, 연개소문의 탁월한 지휘로 패퇴하고 만다. 평양직공책마저 실패로 끝난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 백제의 멸망은 평양 직공을 위한 전초기지 확보에 지나지 않았고, 백제 멸망을 기점으로 신라와 당의 이해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평양직공책이 실패한 662년부터 당이 고구려 공격을 재개하는 666년까지 고구려와 당은 일종의 소강상태에 있었다. 그때까지의 격전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으로서의 그 사이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유인원이 지휘하는 주둔군의 철수가 논의되었지만, 유인계가 고구려 점령을 위한 백제의 전략적 가치를 들어 반대함으로써 중지되었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663년에 금강 하구의 백강구에서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고 한산의 주류성을 함락시킴으로써 백제부흥운동도 종지부를 찍었다. 군사적 긴장정책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려던 일본의 대화조정은 백강 전투의 대패를 계기로, 여러 모순의 총체적 노정으로서 내전의 성격을 띠는 임신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당은 부여유을 웅진도독에 임명한 뒤 665년 문무왕과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하여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664년,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죽었다. 대당강경세력인 연개소문이 죽음으로써, 당에 대한 노선을 놓고 벌어진 정치적 공방이 연개소문 자제간의 내분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666년, 말아들 남생은 당으

로 망명했고, 동생 연정도는 신라로 투항하고 말았다.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정책을 완료한 당의 관심은 다시 고구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당은 마지막 고구려 공격군을 편성했다. 667년부터 시작된 공격은 668년 평양성이 함락됨으로써 끝났고, 고구려는 멸망했다.

신라는 여전히 백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당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당으로서는 비록 원래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고구려 정벌을 위해 확보한 백제 고지를 신라에 내줄 이유가 없었다. 신라는 왜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고구려 유민들의 반당운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671년 신라 문무왕은 사비성에 소부리주를 설치하고 진왕을 도독에 임명함으로써 백제 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674년, 당은 고구려 유민들의 반당운동에 대한 진압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신라를 공격했다.

이제 신라와 당은 마지막 승부를 겨룰 수밖에 없었는데, 675년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을 격파함으로써 676년 당의 안동도호부를 요동고성으로 철수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전투는 끝이 났지만, 이 전쟁이 수·당의 고구려 점령 및 복속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698년 고구려 유민들에 의한 고구려 고지에서의 발해 건국으로 말미암아 수·당의 오랜 숙원이 결국 실패함으로써 비로소 전쟁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7세기 동아시아 전쟁은 기본적으로 당의 전략을 중심으로 연동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라나 백제, 일본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 단, 이 전쟁의 와중에 일어난 동아시아 각국의 변화는 작지 않았다. 신라와 발해, 일본은 전쟁 직후부터 당제를 수용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강화했고, 동시에 전쟁의 와중에 발달한 교통로와 확대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당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망은 더욱 확장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내적 동력으로서 각국의 내부에서 진행된 농업생산력의 증대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바탕에는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진행된 각국의 중앙집권성 강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당 중심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적 국가체제 정비가 이루어졌던 셈이다. 실제로 당시 신라인들이 이 전쟁을 '삼국통일'로 평가했더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그 이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가 중요하다면, 조심스레 이 전쟁을 연동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출발로 평가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 참고문헌

- 김영하,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007.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윤경진,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
이정빈,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무엇을 바꾸었나?」, 『역사비평』 126, 2019.